

# “남원 연수관광지도 보조금 부적정”

### 감사원, 전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15건 발표 남원시 민자유치대책 없이 추진 불구 전북도 30억 지급

전북도의 부실행정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남원시가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승인조건과는 다르게 민자 유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전북도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북도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리산 자락 운봉읍 일대 233만㎡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을 집중 유치해 휴양레저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민자 4.137억원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5.0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원시는 행정자치부의 투자사업 심사 승인조건인 민자 유치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총 30억 원의 보

조금을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15억원만 남원시가 당초 지급 목적(운영비)과는 다르게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했는데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그 결과 지방재원 조달과 민자 유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규모는 대폭 축소됐고, 남원시가 매입한 토지 21만㎡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전북도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개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171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14개 시·군에 전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2014년 4분기 일 반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분기준을 잘못 적용해 전주시 등 4개 시·군에는 29억 원을 적게 준 반면 임실군 등 10개 시·군에 같은 금액만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형 기자

## 군산해양항만청장에 홍상표씨

10일 신임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서기관)에 홍상표(洪尙杓·52)씨가 임명됐다.

홍상표 신임청장은 제주도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우현고와 제주대학교(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서무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류중빈 군산해수청장은 선원복지고용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도당 당원들과의 만남. 전북지역 예산안 삭감 항의 시위 중인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을 찾은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전라북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전북도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친환경 비료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순창군과 장수농협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는 ▲토양환경적정성 ▲유기질비료·화학비료 사용량 ▲토양검정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도는 올해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사업에 약 410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4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리는 전국친환경비료연찬회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본격 착수

국토부, '연구용역' 공고... “이르면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예타 등 계획”

정부가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시설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오는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새만금 신공항 수요예측 단계에 돌입했다.

연구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연구비는 2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연구에는 △새만금 등 전북지역 항공수요 예측 및 영향요인 분석 △항공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전북지역 공항 이용객 특성 세부조사 △전북지역 과거 항공수요 예측·실적 비교 △새만금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특히 국토부는 향후 새만금 신공항 건설 시 새만금 개발계획 등 기존 계획과 현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항 후보지의 적합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년~2020년) 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로 지역 항공수요 예측 등 연구결과를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8년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획 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명령”

### 무주군의회, “건국 이래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무주군의회는 10일 7명 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유승열 의장 등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9년 동안 나빠져만 가던 국민들의 삶이 급기야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건국 이래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통해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유지를 위해 거국종횡내각, 2선 후퇴, 하야 등 갖은 꼼수로 일관하는 행태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정·부패 세력의 권력 연장 수단일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근 보도된 모든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국가조직·기구를 개인 소유물 처럼 사용”

### 진안군의회, 시국 선언문 발표

#### 진안군의회 시국 선언문 발표

진안군의회는 10일 박명석 의장, 정옥주 부의장 등 7명의 의원(배성기, 김남기, 이한기, 신갑수, 김광수)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유린 사태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의원들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아 대리자로서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권력을 일개 아나지에게 넘겨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공권력

이 개인의 영달과 재산 축적에 쓰여졌음은 물론이고, 국가조직과 기구를 자신들의 소유물 처럼 사용했다며, 이것은 봉건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배반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청와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시죄,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헌법파괴 국기문란의 진실 해명, ▲지진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검찰은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통한 사태 진상 파악,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지도부 사임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검찰,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휴대전화 확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 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2일 만이자,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지 4일 만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후 12시 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우 전 수석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 2박스 분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중에는 우 전 수석과 그의 부인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뒤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60·구속)씨의 국정농단을 감찰·예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모른척 했다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된 폭로도 나온 상황이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택 전 참조경 제추진단장이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심회를 최씨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시점이 압수수색 전날인 만큼, 우 전 수석이 사전에 재단 측에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